

[답 변 서]

1. 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법안 건수가 2만 2천 건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건수 늘리기용 법안이 늘어나면서 처리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심도있는 법안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입법공해'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적정 수의 내실있는 법안 발의가 이뤄지도록 당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기타 (●)

이유 :

당 차원의 조치와 국회 차원의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당 차원의 조치로는 ▲의정활동의 질적 제고방안 교육 ▲단순실적 위주의 의정활동 평가금지(공천심사 등) ▲정책역량의 입법지원 강화 및 사무처 순환배치 자제가 필요합니다. 국회 차원의 조치로는 사회적 쟁점이 아닌 단순 실적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가령 국회의장 직속으로 '법률안 정비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일괄 검토조정해서 수 백건 이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입법공해는 상당히 감소할 것입니다.

2. 발의법안 건수가 늘어나면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계류되는 법안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 자동 상정은 상임위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법안심사소위도 법안이 자동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기타 ()

3. 20대 국회는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법안심사 소위 월 2회 정례화와 폐회 중 상임위 개최를 명시하였지만 선언적 규정에 그쳐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의원 또는 정당에 벌칙(수당 등에 대한 페널티)을 강제하는 방식의 국회법 개정 찬성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기타 ()

이유 :

1. 일하지 않으면 월급이나 수당을 받아선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을 부여해선 안 됩니다. 우선 법안심사소위 월 2회 정례화를 위반한 소위원장과 폐회 중 상임위 개최를 해태한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는 경고의 의미로 그 다음 달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정당에 계도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징벌적으로 국고보조금 배분액을 삭감하고, 그 차액분을 군소정당의 정책연구비 증액에 사용하도록 재할당해야 할 것입니다.

2. 아울러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018. 1월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

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는 국회에 2년 이상 계류 중인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은 확정된다.”고 국회의결에 의한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2년 이내에 사회적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법률안의 최종결정권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과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을 하는 국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통과된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개정을 청구하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처리 및 지방의회의 임기와 관계없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강제로 지방의회가 일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4. 국회는 상임위와 소위에서 상정된 법안 등 안건에 대해 관행상 합의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하더라도 1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숙의과정을 거치되 법안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법에 명시된 다수결에 의한 표결처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기타 (●)

이유 :

다수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다수결에 의한 표결처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 경우엔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구조상 또 다른 특권이나 폐해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진보정당의 경우엔 노동개악, 규제개혁 등의 법률안에 대해 사회대개혁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상임위별로 1~2인의 소수에 불과해 다수결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섭단체간 합의가 있다고 해도 사회적 쟁점이나 이슈가 되는 법안에 대해선 다수결보다는 국민투표에 회부해 국민의 의사를 묻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5.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으로 인해 법안처리 지연과 ‘월권’ 등 수 십년째 국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하거나 또는 개선하는 방식으로 현행 제도를 바꾸는데 찬성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기타 ()

이유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하거나 30일을 경과할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6. 국회의원의 막말이나 불법행위는 국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윤리특위를 통해 다루도록 돼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한 번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결정한 적이 없어 동료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윤리특위 회의록 공

개 또는 독립적인 윤리심사위 구성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기타 (●)

이유 :

민중당은 ‘국회의원 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주권자의 심판을 주장합니다. 국민들은 지자체 의원과 단체장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소환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및 비례의원에 대한 소환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들 스스로 채용비리, 사학비리 그리고 겸직금지 위반 등 윤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보조적으로 독립적인 윤리심사위를 구성해 자료제출권과 조사권을 갖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의 윤리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일상적인 의정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영국에서와 같이 외부 독립기구에서 국회의원 수당 등 보수를 결정하고 의원 수당과 활동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③ 기타 ()

이유 :

국회의원 수당과 활동비는 ‘국민의 뜻대로’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민중당은 이미 ‘국회의원의 월급이 얼마나 적정한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활동을 첨부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중당 ‘국민의국회건설운동본부(본부장 김종훈 국회의원)’은 10만 명의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발안위원회’를 모집해, 이들이 각 동별로 심의기구를 구성한 후, 3월 15일 전국단위 발안위원 총회를 개최해 여기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정하고 이를 21대 국회 1호 법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의 3배 혹은 노동자 평균임금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

첨부 1. 국회특권폐지 국민발안위원 모집 현황 (국민의국회.com)

민중당은 국민의 의견을 모아 특권폐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특권폐지
국민발안위원
2020.1.29.현재

1 7 1 9 5 명

“전국의 국민이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국회특권 폐지를 위해 모아주신 의견

국회특권폐지를 위해 우선해야 할 제도



국회의원 월급은 얼마가 적정한가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권폐지 국민발안위원 참여 홈페이지 WWW.국민의국회.COM